

이재용 '사법리스크' 결론 임박... '뉴삼성' 작업 빨라지나

(삼성전자 회장)

주중 1차 결심... 이 회장측 결백 주장 무죄 판결시 본격적인 경영행보 기대 지배구조 개편·M&A 등 과제 산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움 전시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년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 1차 결론이 임박했다. 지지부진했던 '뉴삼성' 작업도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고, 2~3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용 7년 재판 끝날까

일단 재판 결과는 예측 불허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양측도 굳건하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프로젝트G'다. 프로젝트G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계획 등을 담은 내부 보고서다. 검찰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이 회장 승계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G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 측에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며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열린 마무리의견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측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되면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게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주주 이익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는 논리로 결백을 내세우고 있다.

만약 검찰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간다면 삼성전자 '사법리스크'는 더 이어질 것으로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검찰 구형에 따라 판결이 이뤄지면 삼성 측은

서 항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이후 3년을 넘게 이번 재판에 묶여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7년이 넘게 법원으로 꾸준히 출석 중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해외 출장과 공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故 이건희 선대회장 사망과 3주기 등 가족행사는 물론, 회장 승진과 1주년 및 '신경영 선언' 30주년 등을 맞이하면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 신경영 선언 기대감

이 회장이 이번 1심으로 오랜 사법리스크를 끝낼 수 있다면 '뉴삼성'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 회장이 경영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동안 중요한 과제가 쌓였기 때문이다.

당장 컨트롤타워 회복이 시급하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폐지한지 7년이 넘으면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는 대폭 축소됐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 이 회장이 긴급 출장을 오가며 피해를 최소화 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열사간 협력이 어려워 위기 극복 역량을 살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영 선언을 이을 새로운 경영 철학을 기다리는 분위기도 확대됐다. 신경영 선언이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 하긴 하지만, 30년이나 지난 만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뉴 삼성'을 통해 미래 육성 사업을 다시금 확인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삼성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어서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시급하다. 삼성생명 지분 문제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이 크게 약화되고 자칫 해외 자본에 삼성전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도 확대하는데 성공한 만큼,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이후에는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의미있는 M&A'도 약속했던 시기를 넘기고 있다. 2021년 '3년 내'를 말했지만, 아직도 그렇다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미 M&A에 좋은 시기를 놓친데다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미래 투자에 대한 고민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몇년이 M&A를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삼성전자는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불확실성과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이 회장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 순항... 5년간 4兆 이상 투자 이끌어

KIAT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효과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팩토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 유

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본사를 이전한 3건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으로, 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 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10일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경북대 이수출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2월 9일은 공익신고의 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걱정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인터넷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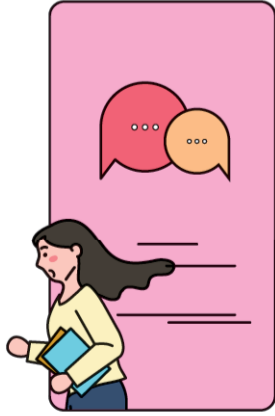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보호받기